

북한

개요: 북한 정권은 모든 종교 활동을 철저히 통제하고 김 씨(氏) 일가에 대한 극도의 이상화를 준(準) 종교로 지속해오고 있다. 비밀리에 종교 활동에 가담하는 사람은 체포, 고문, 구금되며 처형되는 경우도 있다. 현재 중국에서 강제 송환된 난민을 포함하여 신자 수 천명과 그 가족들이 강제 노동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는 상태이다.

미국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는 이와 같이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억압하는 북한을 ‘특별관심대상국(CPC)’으로 재지정할 것을 권고한다. 미국무부는 2001년부터 북한을 특별관심대상국으로 지정해 왔다.

배경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은 변함 없이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정권으로 심각한 인권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북한은 오래 동안 김 씨 일가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을 요구하는 철저한 이상화 정책을 펴왔다. 이러한 이상화가 계속되는 한 종교의 자유나 인권 상황이 개선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북한으로부터의 정보 수집과 정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북한 망명 신청자와 북한에 인도주의 지원을 제공하는 단체들은 종교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지속적으로 전하고 있다. 2013년 3월, 유엔인권이사회는 “조직적이며 폭넓게 자행되는 심각한 인권 탄압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특히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인권 침해 상황을 중심으로 그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북한인권조사위원회를 설립했다. 2014년 2월 발표된 조사결과에 따르면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및 의사 표현, 정보,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거의 철저히 무시”되고 있다.

승인되지 않은 모든 종교 활동은 금지된다. 평양이나 주요 불교 사찰을 중심으로 종교 활동이 허용되기는 하지만 범위가 제한적이고, 철저히 통제되며, 관광이나 외국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전시 용으로 관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은 성분 제도를 통해 모든 세대를 김 씨 일가에 대한 충성도를 기준으로 분류하는데, 여기서 신자들은 최하층으로 분류된다. 기독교 전파는 정치적 범죄에 해당하며, 많은 신자들이 관리소라는 악명 높은 강제 노동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다. 현재 관리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이 15만 명에서 2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그 중 무려 1만 5천 명이 종교적인 이유로 구금된

사람들이다. 종교적 신념 때문에 수감된 사람들은 다른 수감자들에 비해 가혹한 대우를 받으며 신앙을 포기하도록 끊임 없이 박해를 당하고 있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정권은 중국에서 강제 송환된 망명 신청자들에 대해 그들의 종교적 신념과 소속에 대해 심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종교 서적을 배포하거나 남한의 종교 단체와 연계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은 학대, 투옥하며 처형하기도 한다. 공안 및 정보기관 출신의 탈북자들은 보안 요원들이 종교의 위험에 대해 국경 경비대원들을 교육하고 교인들을 체포하기 위해 중국에 위치한 개신교회에 침투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2013-2014 년 종교의 자유 상황

불교에 대한 정권의 통제: 각 지에서 불교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북한 관영방송의 보도가 있기는 하지만 해당 보도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북한 난민들에 따르면 불교 사찰 및 사원은 문화 유적지로 유지되고 있으며, 법회나 참배 공간으로서의 기능은 하지 않는다.

기독교에 대한 정권의 통제 및 억압: 평양에는 천주교회 한 곳, 개신교회 두 곳, 러시아 정교회 한 곳이 있다. 북한 정권은 정부의 승인을 받은 “가정교회”가 북한 내에 500 곳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남한 학자들에 따르면 가정교회의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1950 년 이전에 기독교인이었던 신자들의 가족이며, 이들은 보통 별도의 지도자나 성경 없이 예배를 진행한다.

북한인권정보센터에 따르면 종교물을 소지하거나, 승인되지 않은 종교 집회를 개최한 경우, 또는 해외 종교 단체와 접촉한 사람은 누구든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 최근 공개된 난민 증언에 따르면 성경책을 소지한 혐의로 한 중국 군 간부의 아내가 2009 년 공개 처형되었으며, 평안남도 평성시 구월동에 위치한 지하교회 신도 23 명이 2010 년 체포되었다. 또한 2011 년에는 함경북도 온성군 삼봉구에서 예배를 진행한 혐의로 일가족 세 명이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남한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남한 예능 프로그램을 시청하거나 성경책을 소지한 혐의로 지난 해 처형된 사람의 수가 무려 80 명에 이른다. 2013 년 4 월, 선교단체인 예수전도단(Youth With A Mission) 활동을 근거로 미국 시민권자인 케네스 배(Kenneth Bae)에 대해 적대범죄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15 년 형을 선고했다.

중국 내 북한 난민: 중국에서 강제 송환된 사람들이 남한이나 미국의 교회 및 선교사와의 접촉 여부와 관련하여 조직적으로 심문을 받으며, 기독교로 전향하거나 종교물을 배포한 것으로 의심될 경우 또는 해외 단체와 지속적으로 접촉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은 가혹한 처벌을 받는다는 보도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북한 정권은 해외 선교사의 선교활동이나 종교서적 배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관련자가 체포될 경우 정보를 제공한 주민에게 보상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의 정책 수립을 위한 제언

북한 내 종교의 자유 및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미국 정부는 제한적이거나 북한 정권과 접촉할 때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하고 수감자 석방 등 가능한 부분에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미국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북한을 특별관심대상국으로 재지정할 것과 함께 다음과 같은 사항을 미국 정부에게 제안한다.

- 일본, 한국을 중심으로 이 지역 동맹들과 협력하여 인권 및 인도주의 관련 문제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악명 높은 강제 노동 수용소 폐쇄 등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 나가야 한다.
- 북한의 심각한 인권 탄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중국의 지원을 독려하고, 중국이 자국에 머물고 있는 북한 망명 신청자들에 대해 유엔난민고등판무관 및 국제 인도주의 단체의 지원을 허용하고 이들에 대한 북송 시 1951년 난민협약, 1967년 난민의정서 또는 고문방지협약을 위반하지 않도록 하는 등 중국 정부가 망명 신청자 보호에 대한 국제법상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야 한다.

2012년 북한인권법 조항을 완전히 이행해야 하며, 북한 내 정보 및 언론매체의 접근을 확대하고 민주주의 및 인권 신장을 위한 비정부기구들의 역량을 강화하며 난민을 보호하고 재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인도적 지원이 제대로 전달되도록 감시하는 데 승인된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